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병신년(丙申年) 새해 벽두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망국의 한을 털어내고 70년 넘는 역사를 거치면서 이 같은 북한 리스크는 늘 존재해 왔고, 우리는 이런 상황을 극복해 세계 경제 규모

## 강원포럼

박용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도 부의장



제인 미국과 협조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바라보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할 대목이다. 중국이 그동안 북핵 불용

12위로 우뚝 섰다. 그러나 북한은 오로지 '핵'이라는 카드로 국제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어쩌면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는 핵을 갖고 있다"는 시위의 일환으로 핵실험을 강행한 것일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집권 4년 차에 접어들어 김정은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2013년 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면, 네 번째 핵 실험은 체제의 공고화를 선언하는 정치적 포석이 깔려 있을 수 있

다.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자신들의 군사적 능력과 성과를 외부에 표출하고 체제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심산이 아닐까. 아니면 미국과 대화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술수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손에 핵이 들려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남한과 북한이 공존하는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사이에 끼여 있다. 여기에 대평양을 넘어 미국과 동북아시아의 관계에 깊숙이 개입해 있는 모양새다. 북한은 동북아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주변국의 군비확장의 수단이 되고, 결국 평화질서의

틀에 심대한 균열을 가게 한다. 북한의 핵은 방어수단이 아닌 공격의 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려면 누구와도 마주 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핵실

의지를 공언해온 점을 언급하면서 그런 의지가 실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북핵이 우리만의 리스크가 아닌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임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 국민은 '통일'이라는 지상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 통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우리의 통일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

## 북한은 당당하게 핵을 포기하라

제사회에서 당당히 통일 한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힘의 논리가 아닌 우리는 하나라는 의지로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의 핵은 체제를 지키는 것이기보다 불안한 체제를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당당하게 핵을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슬기롭고도 꾸준한 대화를 통해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는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두에서 이번 북핵실험 사태가 슬기롭게 극복될 수 있도록 국론을 모아야 할 것이다.

협이라는 카드를 내놨다. 전형적인 이중플레이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지난 3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기본으로 대화와 압박이라는 '두트랙' 전략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원칙은 확고부동해야 한다. 다만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핵실험의 대응으로 가장 먼저 대북 확성기 카드를 내민 것은 이런 맥락과 일맥상통하다.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혈맹관

외부 기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오각형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형상변경 조감도.

### 변경된 조감도 첫 공개 공연 연출 유리하게 설계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상징하게 될 오각형 모양의 새로운 개·폐회식장 조감도가 나왔다.

최문순 지사는 13일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폐회식장 형상변경 보고를 받았다. 평창조직위는 당초 경제성과 지형요건을 고려해 직사각형(스타디움) 모양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송승

환 개·폐회식 총감독이 무대연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결국 다시 구조변경을 추진했다.

변경된 개·폐회식장은 음향, 영상, 조명 등 공연 연출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구조 변경에 따라 관람석은 기존 4만석에서 3만5,000석 규모로 축소되고 중앙에는 개·폐회식을 위한 무대가 들어선다. 조직위는 지난 7일 실·국장회의에서 형상변경에 대한 의견을 모은 후 8일 조양호 조직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조감도

##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 공개

### 오륜기 상징 오각형 3만5000 관람석 규모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의 모습이 공개됐다.

강원도는 13일 기존 사각형 형태에서 오각형 형태로 변경 설계된 올림픽 개·폐회식장의 조감도를 공개했다.

공개된 조감도에 따르면 올림픽 개·폐회식장은 오륜기를 상징하는 오각형 형태로 개·폐회식 전용공간으로 설계됐다.

당초 4만석 규모에서 3만 5000석으로 관람석이 줄어들었으며 시설면적도 5만8400㎡에서 5만5600㎡로 감소했다.

의식행사장도 8000㎡에서 7900㎡로 축소됐다.

도는 4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5월에 공사에 들어가 2017년 9월 완공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변경된 개폐회식장은 오각형 형태로 음향, 영상, 조명 등 공연연출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백오인 105in@kado.net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와 선급금 반환채무

**Q** 선급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급금을 반환할 책임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대책임인가, 아니면 특정 구성원의 개별책임인가?

**A**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선급금 반환채무에 관해서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각자 책임을 진다. 분담이행방식은 물론이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도 선급금 반환 사유가 있는 구성원만이 개별로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다른 구성원은 반환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민법상 조합으로 보면서도 관급공사에 공사대금채권이 지분별로 각 구성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판례가 변경되기 이전에도 대법원은 선급금 반환채무에 관하여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도 연대책임을 부정하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선급금과 공사대금은 각 구성원별로 따로 따로 정산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이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기성공사대금을 가지고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구성원의 선급금을 총당함에 있어서는 그 공사대금 중 해당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총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지 이와 달리 다른 구성원의 몫까지 포함한 총 공사대금에서 총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68584 판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의 내용에 선급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다른 구성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급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 방법으로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문서로서 보험사업자의 보증보험증권이나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 등 그 담보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연대책임의 범위는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성원의 선급금 반환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1623 판결).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건설업 취업자 8년만에 최대... 지난해 182만명

건설업 취업자 수가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2만3000명으로 전년(179만6000명) 대비 1.5%(2만7000명) 증가했다. 등한 뒤 2011년 175만1000명, 2012년 177만3000명, 2013년 175만4000명으로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이다가 2014년과 지난해에 걸쳐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작년 말 기준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 수의 7.0% 수준이다. 박경남기자

건설업 취업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007년 184만9000명을 나타낸 이후 2008년 181만2000명으로 줄어들고, 2009년(172만명)에는 감소폭을 확대하며 180만명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2010년 들어 175만3000명으로 소폭 반